

# “하천 부지, 불법 거래·개발 실태조사 필요”

무주군 공정리 인근 주민들, 불법 퇴적물로 인한 악취피해 호소

무주군 무주읍 싸리골17번지 일원 하천 부지를 임대한 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수 방출로 적상천 지류의 수질이 흉악해져 있다.

해당부지는 재무부가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적상천 하천부지로 본 땅은 임대한 업자 A모씨가 3년 전 2,800여평의 부지를 전 사용자로부터 매입해 채소와 과일수 등을 경작하고 있으나 다량의 불법 퇴적물로 인해 파종을 해도 곡식을 수확할 수 없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식물이 고사하거나 부실하고 공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곳은 무주와 금산을 연결하는 국도37호선과 접하고 적상천변 반딧불이 서식지와도 근접해 적상천 수질의 산소용존량 부족으로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다.

문제의 발단은 A모 씨가 기존에 매물된 1.5m높이 가령 분량의 지렁이분변토를 타지역에서 반입한 토양(25t/㎡, 200대분)과 혼합 복토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부폐한 침출수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 호소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 이원봉(70세, A모씨의 장인)씨는 “자신들은 3년 전에 전 사용자로부터 땅을 매입했기에 전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모로쇠로 일관하



오염수로 뒤덮인 무주 하비마을의 어느 공사현장(사진 왼쪽), 싸리골에 흘러온 오염수(사진 오른쪽).

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인들은 “하천부지가 국가와 지자체 소관으로 일반 거래를 할 수 없는 데도 매매해 거래가 이뤄진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다.

A모씨 측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주민 B모 씨는 “이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장비를 이용해 매립하는 과정을 봤으며 몇 개월 전에도 밤에 외지에서 음식을 쓰레기 퇴적물로 추정되는 것을 파묻었다”며 “낮에는

버젓이 덤프트럭으로 쓰고 온 흙을 기준 음식을 쓰레기 혼합물과 혼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품과 악취를 풍기는 검붉은 침출수가 주변은 물론 적상천을 오염시키고 청정 무주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에 행정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법이 자행됐다면 행정조치 등 관계기관과 체결한 임대계약은 미망히 해지돼야 한다”고 김모 씨(60세)는 피력했다.

무주군 관련 주무관은 “A모 씨는 비포장비료 사용사전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투기 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사항이 있을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불법퇴적물을 퇴비나 비료로 인정할 경우, 비포장비료를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생산법 또는 비료수입법을 등록 신고한 시·군·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사용 2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비료관리법에 명시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형 드론산업’ 미래 청사진 그린다

시, 중장기 드론·UAM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제 발굴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주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인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장기 드론·UAM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정책과 시장현황 등을 분석해 드론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나이가 지연경제를 견인할 연계 과제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스드론 모빌리티, 드론 레저·스포츠 등 분야별 핵심전략 도출 및 실행과제 발굴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 방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 공간 구축 및 운영 모델 계획 △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방안 등 전주시가 제안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중장기 육성계획에 사업별·연도별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계획도 담기로 했다.

특히 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K-UAM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응해

탄소·수소 등 전주시 주력산업과 연계한 상용화 R&D 과제 개발을 통해 대규모 예타사업 발굴도 준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하는 등 드론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왔다.

그 결과 시는 드론산업 육성 거점 공간인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국비 40억 원)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드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확보 3건(37억8000만 원)과 실증사업 추진 등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서 전주 남고산 일대가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개발 드론에 대한 비행 승인 절차 면제·간소화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상용화모델 촉진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 전주시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

전북권역 공립요양병원 최초 지정… 96병상 치매전문병동 구축

전주시립요양병원이 전북지역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치매 환자가 더욱 전문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전주시립요양병원이 전북권역 공립요양병원 중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로 인한 폭력과 맹상 등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 심리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전주시립요양병원을 비롯한 전국 공립요양병원 11곳과 이번에 함께 지정된 민간요양병원인 원광효도요양병원(익산)을 포함한 총 15곳이 지정돼있다.

시는 민선8기 신바람복지 구현을 위한 공약사업인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주시립요양병원 본관 2층과 3층 96병상 규모를 치매전문병동으로 리모델링했다. 특히, 행동심리증

상 환자 집중 치료를 위한 1인 병실과 병동 내 치매환자 전용 프로그램실, 상담실, 심리안정실 등 치매환자의 안전과 효율적 돌봄을 위한 치매친화적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립요양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와 치매전문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치매안심병원이 운영되면 보다 전문적인 증상 치매환자 치료가 가능해지고, 전문 치료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증상 완화로 환자 돌봄에 대한 보호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료 지원 강화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유망 창업가 발굴 ‘전주창업경진대회’ 개최

사전

육성

프로그램으로 △MVP(최소 기능제품) 실행방안 △IR(Investor Relations) 작성법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코칭 및 워크숍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시와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오는 9월 14일 전라감영에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유망 창업가 발굴을 위한 ‘제5회 전주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전주창업경진대회는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전북 최대 규모의 창업박람회인 ‘전북창업대전’과 ‘투자광광워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대회부터는 최종 선발팀을 기준 5개 팀에서 8개 팀으로 확대되고, 선발된 팀들에게는 사업 개발 기초부터 심화 단계 교육까지 성장지 원프로그램이 2단계로 나눠 지원된다.

또한, 선발된 팀은 올해 처음 도입된

덕진구 기술지원단은 총 4명으로 기업체 현장에서 근무이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각종 방지시설에 대한 진단 및 적정 운영방안, 운영일지 작성방법 등을 교육하고 노후시설 개선방안, 관계법 개정사항, 자율점검 참여 등 전반적인 환경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